



# 강원경제 살릴 '3대 법안' 첫걸음부터 배격

〈재투자법·화폐법·은행설립법〉

도가 제안하는 경제 분야 대표 대선공약인 '지역재투자법'이 각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살리기 3대 법안(재투자법·화폐법·은행설립법)'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각 정당에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답변도 받지 못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메아리 없는 구호에 그칠 상황이다.

■서민금융과 직결되는 법안= 지역재투자법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업무를 수

자금 유출 막아 돈가뭄 해소 지역인재 채용 등 효과 우수

대선주자 외면 논의조차 안돼 지역경제에 여론 결집도 난항도 "연내 입법화 위해 총력"

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자금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1월 기준 시중은행의 지역별 대출금 비중(한국은행 집계)을 보면 전체

6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강원도는 1.1% 수준으로 예금 비중(1.8%)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대출금 비중(1.8%)에 비해서도 낮아졌다. 금융뿐만 아니라 외지건설사, 대형마트의 진출 등으로 도내에서 빠져나가는 지역자금이 연간 5조원에 달하고 있다.

양양시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강원도가 제안한 지역재투자법은 금융권 수신고의 일정 규모를 지역 서민대출에 할당하는 금융뿐만 아니라 대형업체들의 현지법인 설립과 지역제품 구매, 지역인

재 채용 등을 제도화하는 실물경제 부분도 포함한 것이 기존 지역재투자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계와의 공조 부재=도가 올 1월31일 지역재투자법 입법화에 이어 대선 공약화를 발표한 이후 진척사항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축로 지난달 8일 국회에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을 통한 금융권의 지역 내 서민금융지원 의무화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이 전부다.

도와 경제계 간의 공조를 통한 지역 내 여론 결집부터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35개 경제단체연합체인 강원경제단체연합회가 지난달 28일 춘천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성명서로 오색사도 설치사업 재심의 촉구만 채택됐고, 지역재투자법의 대선공약 채택은 논의되지 않았다.

도는 연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목표다.

도 관계자는 "각 정당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고, 지역 서민경제와 밀접한 법안인 만큼 대선에서 논의되도록 공약채택을 적극 권의하겠다"고 했다. 신하림기자

## 건설업계 수주액 최근 10년 이래 최저 수준

지역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았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3월 도내 종합건설업체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64.14%나 감소한 772억7,700만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수주액은 올 1월(35.83%)과 2월(45.68%)에도 줄어든데 이어 3월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누적 금액은 1,591억6,000만원으로 전년 수주액보다 55.11%나 빠져나갔다. 특히 올해 3개

월 1~3월 누적 수주물량 1,591억원 올림픽 등 대형공사 마무리 직격탄 예산 확보·분할 발주 등 대책 시급 월간 수주액은 지난 10년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1,156억5,400만원)을 제외하고 가장 적다. 공사물량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 침체가 불가피하다. 올해 공사수주와 연관된 지난

해 기준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계약액은 2015년 대비 4,362억8,700만원(15.0%) 감소한 2조4,716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계약액 감소는 올해 지역 업체들의 실적 악화와 수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향후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없어 수주난이 불가피하다"면서 "건설 관련 예산 확보, 분할 발주, 적정 공사비 적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우윤기자

유력 대선 주자들, 건설·환경분야 등 공약경쟁 본격화

# “5년간 50兆 투입, 달동네 정비 추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공약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도시재생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되면서 앞으로 주거·SOC 분야 공약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5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엔 불과했다”며 “매년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100개 동네에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아파드단지 수

문재인 ‘도시재생 뉴딜’ 발표  
공적재원 활용 주거지 개선

안철수는 미세먼지 해결

대량평 ‘오픈 캐비닛’도 제안

유승민, 자사고·외고 폐지

홍준표는 친기업시장에 방점

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 예산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금, LH공사, SH공사 사업비 등 총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입이나 임차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전 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 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대대적인 도시재생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한양대학교 정책간담회에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중국발 미세먼지·화력발전소·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9일에는 차기 정부의 ‘오픈 캐비닛’을 거론하며 “대량평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전문가라면 집권 후 등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같은 날 자사고·외고 및 대입 눈속 폐지, 교육 제도의 법제화 등을 뼈대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자사고·외고 폐지와 함께 모든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면서 “사교육을 조정하는 논술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9일 밤 경남지사직 사퇴 의사를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자유와 시장’에 광점을 둔 친기업 경제 공약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황윤태기자 hvt@**

## 社說

### 건설산업·SOC 경쟁력 진단 곁핍기식 안 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경쟁력 진단작업에 본격 나섰다. 이달 중 글로벌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경쟁력 진단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당초 건설산업에 대해서만 경쟁력 진단을 벌이기로 했지만 SOC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조선, 해운업종과 업종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구조조정이 아닌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성장 전략 마련에도 초점을 맞추는 계획이다. 건설산업이 굴곡산업에서 지식첨단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발굴이 필수적이라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경쟁력 진단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건설산업의 미래성장전략을 도출하기로 한 점은 방향을 제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설산업과 SOC 분야의 제대로 된 경쟁력 진단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기대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동안 타 부처가 외국 유명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만든 컨설팅보고서 전례에서 보듯 이번에도 곁핍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유사 보고서들도 결만 번지르르하지 알맹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정책결정에 반영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해 매진 보고서에서 한마디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퍼붓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용역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책결정자들이 할 일을 했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면피용으로 용역을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기왕이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번에 건설산업 경쟁력 진단에 나선 것은 내년부터 건설업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런 만큼 업계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실질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알찬 용역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 동해항 3단계·국회 스마트워크센터·부산 신항 토도 제거

## ‘총 5077억’ 기술형 3건 주인찾기 본격화

###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 이번주 82건 8771억 집행  
오송2 진입로 등 총평제 5건 논길

조달청은 이번주(4.10~4.14) 모두 82건, 8771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터키, 실시설계기술제한 등 기술형 입찰 3건에 대한 입찰제안서를 받고 낙찰자 선정에 본격 돌입한다. 3건에 대한 추정가격만 5077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먼저 11월 1730억원 규모의 동해항 3단계 방파제(1공구) 축조공사(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턴키)와 408억원 상당의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국회 국회사 무체 수요·실시설계 기술제한)에 대한 입찰제안서를 받는다.

동해항 3단계 방파제(1공구) 축조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1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점수에 참여해 2파전이 형성됐다. 또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는 1차례 유찰 끝에 역시 지난 1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참여해 역시 양자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12일에는 추정가격 2940억7400만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턴키)가 입찰제안서를 받는다. 지난 2월 PQ 점수에 대림산업, 대우건설, 한양 컨소시엄이 참여해 치열한 3파전이 이뤄졌다.

이 밖에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종합평가낙찰제 공사 5건이 연달아 주인을 찾는다. 특히 지난 2월 총평제 심사 기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집행하는 물량

들이어서 낙찰률이 주목된다. 오는 11일 오후 2단지 진입도로(국도 1호선 연결) 건설공사(충북경제자유구역청 수요·336억2900만원)가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어 12일에는 역시 총평제 방식의 광양 철망·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전라남도 광양시·442억3900만원) 개찰이 이뤄진다.

오는 13일에는 총평제 방식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건설공사(부산교통공사·610억9600만원)가 집행된다.

마지막으로 14일 역시 총평제 방식으로 홍도과선교 개량(지하화)공사(대전시·542억2800만원)에 대한 개찰이 이뤄진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72%(5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다. 조달청은 전체 약 22%인 1902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4건, 377억원이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는 15건, 3184억원이다. 이중 1525억원 상당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전망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4233억원, 강원도 1733억원, 대전광역시 565억원, 그 밖 지역이 2240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주 집행 예정 공사 총 금액기준으로 약 88%(7692억원)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다.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70억원)와 수의계약(9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성준기자 newspia@**